

#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이의신청)관리실태 감사결과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의견진술(이의신청) 및 과태료 면제 처리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2015-446호(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관련

## I 감사 개요

- 기 간: 2019. 4. 1. ~ 2019. 4. 19. (15일)
- 대 상: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이의신청, 면제처리업무 등
- 감사범위: 2016. 1월 ~ 2018. 12월
- 감 사 반: 감사팀장 외 4명
- 주요 감사분야
  - ▶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의견진술 관리실태, 면제처리 여부
  - ▶ 단속스티커(표지) 서순처리, 단속업무처리 적정 여부 등

## II 감사 결과

### 1. 총 평

-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구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확인해본 결과, 2016년 ~ 2018년 기간중 불법주정차 단속 379,682건, 의견제출(이의신청) 6,186건이며, 의견제출(이의신청)중 부과제외(면제)는 5,587건, 불가처리는 599건(10.7%)임.
- 또한, 부과제외(면제)에 대해서 각 건당 팀장, 결재권자 서명을 의무화하여 면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본 결과,

2014.10.31 부산시 지침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지침”에 따라 운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7.12.31. 우리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침을 개정 및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 다만, 일부 의견진술서의 증빙서류에 일자가 단속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납품일 및 납품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명세서 이거나,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 면제처리 하였으나 진단서 내용에 응급환자임을 증명할 수 없거나, 특히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부과제외 처리한 일부 사례중 실제 인근 지역에 민원사항(긴급민원 포함)이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민원현장여부인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단속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 불법주정차과태료 의견진술[이의신청] 검토[심의]소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부산광역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지침(2014.10.31.)」, 우리구 교통행정과-92546(2017.12.13.)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지침」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1.5톤 이하 택배 및 화물차량 등(10시~17시), 교통사고 차량, 도난차량, 긴급출동 자동차, 공공업무 수행, 차량고장 등 주요 처리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증빙자료가 미비한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음.

### ☐ 불법주정차 단속사진자료 판독처리 부적정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속차량사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된 차량사진이** 부과근거로써 증빙자료로 미흡하거나 번호판독이 불가하거나, 사유지 내 주차 또는 관할구역 오류 등으로 단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부과자료로 처리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않고, 도로관리 시스템상에서 담당자 전결로 비부과함으로써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알수 없고 자의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자체기준 정립 및 부서장 내부결재를 하여야하나, 이를 미이행함

#### ☐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비부과(면제) 근거서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비부과(면제 1건) 관련하여 소명근거자료 혹은 의견진술서가 누락 혹은 분실상태로 처리된 사실이 있음.

#### ☐ 불법주정차 과태료 50% 이내 감경 절차 부적정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주정차과태료를 50%이내에 감면할 수 있으며, 과태료 징수·감액결정시에는 부서장 결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수하여 그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2016년 ~ 2018년 과태료 50% 감경대상자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 소홀, 담당자 전결로 과태료를 경감한 사실이 있음.

### Ⅲ 조 치 사 항

☐ 행정상 조치: ○건

☐ 신분상 조치: ○명(훈계○명, 주의○명)